

고배당주·리츠에 투자, 주택연금 활용 '현금 유동화' 필요

주식 전성시대와 재테크

④ '현금흐름' 전략

1인가구 월 적정 생활비 198만원
국민연금 평균 지급 70만원 불과
60세 이상가구 자산 81% '부동산'
생활비 부족한 '가난한 부자' 늘어

'100세 시대'가 현실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한 '현금흐름'도 중요해지고 있다. 유동화를 위해 처분이 필요한 부동산이나 예적금 같은 기존 자산만으로는 30년 가깝게 길어진 노후를 감당하기 어렵고, 은퇴 이전에 충분한 연금자산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왔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산 규모는 평균 6억원을 기록했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평균 자산 규모인 3억1500만원보다 2배가량 많았다. 그러나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의 81.3%가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어, 쉽게 유동화가 가능한 금액은 평균적으로 1억 원 안팎에 불과했다. 은퇴 이전에 충분한 자산을 확보했지만 생활비는 부족한 '가난한 부자'가 늘어나는 이유다.

◆ 연금으로 역부족... '현금흐름' 만들어야

지난해 말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0세 이상 국민이 생각하는 1인 가구의 적정생활비는



한 시민이 고령자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197만6000원이다. 국민 대부분은 은퇴 이후 주된 소득으로 국민연금을 꼽지만, 올해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 지급액은 69만8000원에 불과했다. 소득 하위 70%의 고령자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합쳐도 104만7700원이다. 기초연금을 지급받더라도 평균적으로 매달 93만원 가량의 생활비가 부족하다.

적립금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퇴직연금으로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에야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 도입도 제한적으로만 진행됐다. 제도 도입이 더뎠던 만큼, 은퇴를 앞둔 50대의 대다수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금흐름'은 은퇴 후 근로소득이 끊긴 상태에서도 정기적으로 통장으로 들

어오는 활용가능한 수입을 말한다. 과거에는 은행권의 예·적금을 주된 현금흐름 확보 수준으로 꼽았지만, 최근에는 은행권 예·적금 수익률이 3% 이내까지 내리면서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은퇴 이후에도 현금흐름을 만들고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후 재테크'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다.

◆ '노후 재테크' 지속... '자산편중' 유의
예·적금으로 충분한 노후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일정한 현금흐름을 만들기 쉬운 상품으로는 ▲고배당주 ▲리츠(REITs) ▲배당형 ETF(지수추종펀드) 등 배당에 특화된 상품들이 꼽힌다.

고배당주는 배당률이 추가 대비 5% 이상인 주식을 말한다. 기대수익률이 은행 예·적금보다 높고, 기업가치 성장에 따른 자산증식도 기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연말 배당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분기·반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배당만으로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해 대형 빌딩이나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간접투자형 상품이다. 주식처럼 거래가 자유로운 편이고,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만큼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배당형 ETF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펀드나 리츠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개별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 투자 난이도가 낮고, 분산투자되는 손실 위험폭도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월배당형 ETF나 배당성장 ETF 등 다양한 특화상품도 출시돼 있어, 투자성향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은퇴 이후 투자 시에는 자산편중에 유의해야 한다. 주식이나 펀드를 비롯한 고위험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상존하며,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비슷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면 단기간 내에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일부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또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30% 이상의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소득 하위 70%의 고령자라면 노후 재테크에 앞서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1년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한 투자용 계좌 상품으로, 주식·ETF 등 투자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며, 의무가입 기간도 없는 만큼 입·출금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 부동산·보험 등 '뮤인자산'도 활용

투자에 활용할 금융자산이 부족하더라도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나 은행권 역모기지론 등 월 지급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연금이나 목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집값 하락 시에도 기존 지급액을 보장하는 만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며, 주택 가격 상승 시에는 대출을 상환해 주택 소유권도 보전할 수 있어 선택권이 넓다.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에 필요한 비용도 늘었고,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고령자들도 늘었다"라면서 "노년기에는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가 중요해지는 만큼, 자산 규모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적합한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각종 제도도 활용해 안정적인 월 수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홍콩 ELS 제재안 '제동'... 과징금 줄어드나

금융위 대형제재, 금감원 보안 요청
은행권 제재 수위, 과징금 조정될 듯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에 1조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안을 두고 금융감독원에 보안을 요청했다.

금융위가 대형 제재 사안에서 금감원 제재안에 제동을 건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재감리 요구 이후 8년만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판단에 따라 은행권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전을 상정한 뒤 금감원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위 관

계자는 "안전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ELS는 2021년 초 이후 판매된 물량을 중심으로 지수하락과 만기도래가 겹치며 대규모 손실을 낸 상품이다.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 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N H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우리 413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처음 4조원의 과징금을 검토했으나 2조원, 최종 1조4000억원으로 낮추어 제재안을 발표했다. 불완전판매 책임은 인정되지만 이미 홍콩 ELS 손실 배상으로 수조원대 비용이 반영된 상황에서 추가 과징금까지 부과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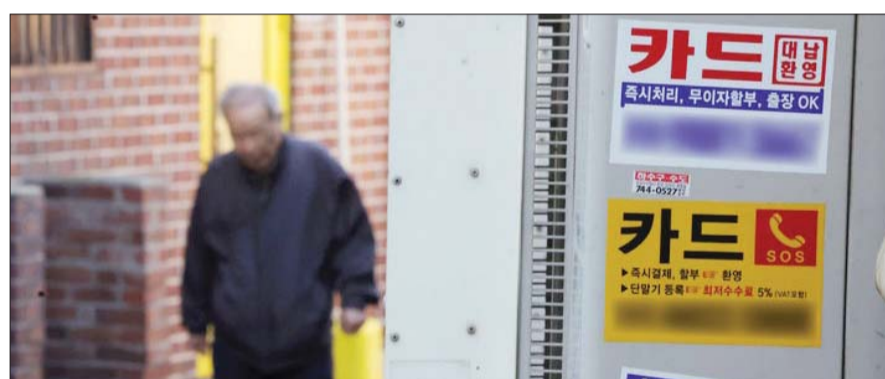
경우 은행권의 자본건전성과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법리 보안을 요구한 만큼 최종 의결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가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고 관측한다.

현재 은행권은 홍콩 ELS 가입고객의 약 97%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한 상태다.

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투자자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불완전판매를 강조하는 금감원의 제재 논리와 법원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위험 분석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백테스트 결과를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이 붙어 있다.

/뉴스시스

'상록수' 이후 장기 연체채권 손질 목소리

카드사·캐피탈사 장기연체 1.5조
"채무, 개인만의 책임은 아닐수도
보호·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최근은행권이 설립한 민간배드뱅크의 장기 연체채권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장기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 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 8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롯데·우리·비씨카드)의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금액은 4709억원 규모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카드사들의 총 장기 연체액은 지난 2022년 1242억원, 2023년 1879억원, 2024년 2561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 4709억원으로 급증했다.

캐피탈사의 경우 장기 연체액이 1조원

을 넘어섰다. 지난 2022년 3464억, 2023년 7956억, 2024년 8222억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1조195억원을 기록했다.

장기 연체 증가 속도는 기업들의 채권 매각 확대 흐름도 웃돌았다. 2024~2025년만 살펴봐도, 대출 채권매매이익 증가율은 15.4%에 그친 반면 장기 연체액은 약 84% 증가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장기 연체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상록수와 같은 장기 부실채권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철 속명여대 소비경제학과 교수는 "장기 소액 연체자들의 경우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부실화된 경우가 많다"며 "경제 위기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채무를 온전히 개인의 책임만은 아닐 수 있다. 이들을 좀 더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금리 최대 8% 청년미래적금 내달 출시

금융위, 2200만원 내외 목돈 기회

청년미래적금이 연 최대 7~8%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3년 만기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p)가 더해지는 구조다. 6월

들어 자금 유입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에서 "청년의 첫 자산형성을 국가와 금융이 함께 돕기 위해 청년

미래적금을 출시한다"며 "청년이 자산을 만들수 있어야 결혼도, 주거도, 창업도 도전도 가능한 만큼 정부와 금융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부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통해 최대 22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나유리 기자